

제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09년 9월 10일(목)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층

- 주최 : 국제 심포지엄 한국 실행위원회,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
- 주관 : 국제 심포지엄 한국 실행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평화바람(군산미군기지피해상당소)]

글심는 순서

국제 심포지엄 순서 3

개회사 이미경 (대한민국 국회의원) * 4

동아시아 심포지움 한국실행위원회 환영사 최승국 (녹색연합) * 5

오키나와 미군기지, 역사와 쟁점 * 7

토미야마 마사히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통해 오키나와와 한국 민중의 연대를 도모하는 모임)

주일 미군기지 문제점 야기 류지 (포럼 평화인권·환경) * 11

주한미군기지 소음피해 현황과 과제-군산공군기지를 중심으로 구중서(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 18

요코다기지 공해소송과 환경안전보장 하야시 키미노리 (일본 학술 진흥회 특별연구원 PD) * 25

동아시아 기지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맞이하여 * 29

이토카즈 케이코 (일본 참의원 의원 오키나와 요미탄)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건을 통해서 본 한미당국의 문제점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의원) * 31

가나가와현 미군기지, 현황과 과제 노모토 요고 (기지가 없는 가나가와를 위한 현상공투회의) * 37

원주 미군기지 기름유출 대응투쟁을 통해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역할 * 41

박수영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한국-오키나와-일본 국제연대 활동의 의미와 과제 서재철 (녹색연합) * 47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 51

한국 실행위원회 * 57

국제심포지엄 순서

사회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개회사 이미경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대표 인사

- 최승국 (녹색연합)
- 토미야마 마사히로(미군기지 반대운동을 통해 오키나와와 한국 민중의 연대를 도모하는 모임)
- 야기 류지 (포럼 평화인권·환경 - 평화포럼)

1부 미군기지 소음피해 현황과 과제

- **주한미군기지 소음피해 현황과 과제 - 군산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구중서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 **요코다기지 공해소송과 환경안전보장** 하야시 키미노리 (일본 학술 진흥회 특별 연구원 PD)
- 질의응답
- 영상상영

2부 미군기지 환경 피해 해결을 위한 우리의 대응

-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와 의회의 활동** 이토카즈 케이코 (일본 참의원 의원, 오키나와 요미탄)
-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을 통해서 본 행정기관의 문제점과 의회의 활동**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의원)
- **가나가와현 미군기지, 현황과 과제** 노모토 요고 (기지가 없는 가나가와를 목표로 하는 현상공투회의)
- **원주 미군기지 기름유출 대응투쟁을 통해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역할**
박수영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 **한국-오키나와-일본 국제연대 활동의 의미와 과제** 서재철 (녹색연합)
- 질의응답과 토론

개회사

이미경 (대한민국 국회의원)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미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오키나와, 일본 등 동아시아에 위치한 미군기지 현황을 점검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먼 길을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근래 미국은 해외기지재배치 정책에 따라 동아시아의 미군기지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택과 오키나와 헤노코 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일들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규모 기지가 반납되었고 앞으로도 반납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7년 한국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익히 알려진 것처럼 기지 내부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토양, 지하수 문제 뿐 아니라 소음 피해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정부와는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함께 모여 꾸준히 논의하는 자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심포지엄이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일본은 주민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통해 연대 기구를 구성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좋은 선례를 참고해 도전과 기회를 만들고, 일본은 한국과의 연대로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방문예정인 인천 부평, 원주, 군산 등의 미군기지 현장을 살피면서 적절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일본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이러한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부지런히 준비한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니 늘 고맙습니다.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촉구만이 현 상황을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란 믿음을 갖으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심포지움의 일본과 오키나와의 참가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한국실행위원회의 환영인사

최승국 (녹색연합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바다 건너 방문하여 주신 일본과 오키나와의 친구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나눕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시간을 내어 주신 이토카즈 케이코 참의원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 2회를 맞이하여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국제심포지움은 요동치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 치러진 선거의 결과로 새로운 시대, 변화의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미군에 관련된 일미동맹을 비롯하여 한일관계, 북일관계 등이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도 얼어붙고 막혀있던 남북 관계가 서서히 풀려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미관계의 개선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부는 화해와 평화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의 주둔에 의한 환경문제는 미군의 무책임한 자세와 불평등한 SOFA 협정 등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기지 중 주독미군과 주일미군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주한미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군사 훈련과 군부대 환경 관리 소홀로 각종 환경오염을 일으켜 왔습니다. 독극물 무단 방류, 기름 유출 사고, 사격장 중금속·화약류 오염, 군용 비행장의 소음 피해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 환경을 파괴했습니다. 지금도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몇몇 미군기지의 외곽 지역에서 기름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으며, 군산과 평택 미공군기지에서 밤낮없이 발생하는 100dB 이상의 소음으로 주민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든 지경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군 군사 전략의 변화에 따라 기지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반환되기 시작한 23개 기지의 오염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지금은 3000억원이 넘는 액수를 한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정화처리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서울의 용산,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인천의 캠프마켓, 원주의 캠프 룡 등을 비롯한 40여개의 기지들이 반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지들의 오염은 이미 반환받은 기지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과 미국정부는 오염에 대한 정화와 복원에 문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와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한국의 정치와 외교에서 심각한 갈등거리가 될 것이며, 한미관계에도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과 오키나와 역시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함께 손을 잡고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문제의 해결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우리의 활동과 연대가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올해로 2회째 접어드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동북아에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매우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근거지가 될 것입니다.

변화를 갈망하는 일본과 오키나와의 시민들의 선택에 다시 한 번 뜨거운 경의를 표하며 변화의 시기에 미군의 환경문제가 없는 지속가능한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힘차게 노력합시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역사와 쟁점

토미야마 마사히로

(미군기지 반대운동을 통해 오키나와와 한국 민중의 연대를 도모하는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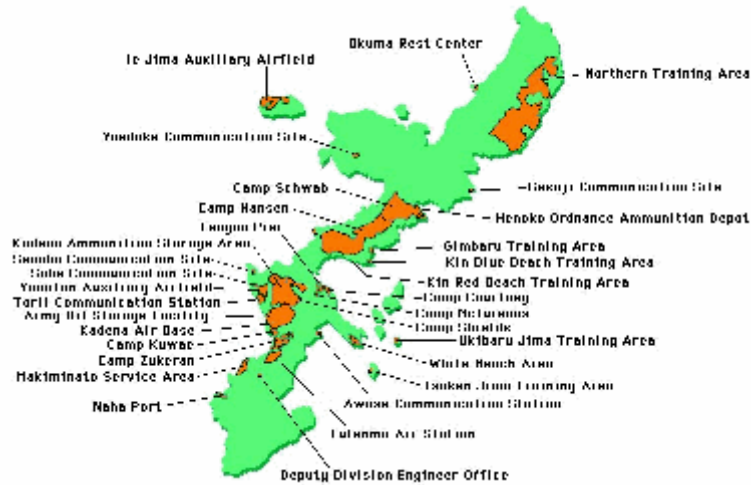
1. 개요

오키나와는 태평양 북부,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하며, 크고 작은 16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인구는 130만 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3월부터 미군과 일본군의 지상전이 전개된 오키나와전쟁에서는 군민 합쳐서 25만여 명이 희생되었는데, 그 중 주민들의 사망자는 15만 명, 오키나와 주민 4명 중에 한 명이 희생된 셈이다.

이때부터 미군은 오키나와를 점령하여, 한반도와 베트남을 공격하는 전쟁의 섬으로 개조하였다. 기지건설을 위해 총검과 불도저로 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1972년의 오키나와 일본 복귀 이후에도 「태평양의 요석」으로서 해병대를 중심으로 미군은 계속 주둔하여, 전쟁 출격 거점이 되어 왔다. 현재, 오키나와 본도의 20%를 미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일본 총면적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 주일미군 전용시설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2. 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의 초점 = 헤노코 · 타카에

《헤노코》



1995년 미군에 의한 소녀강간사건을 둘러싸고 「10·21 오키나와현민 총궐기대회」에 8만 5천명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미군기지 반대 목소리가 오키나와의 목소리로서 일본 언론에 다루어지자 일미 양 정부는 「오키나와에 관한 특별행동위원회(SACO)」를 설치, 후텐마 기지 반환을 내세우며 여론을 잠재우려 하였다. 기지 정리와 축소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나, 6개월 후, 후텐마 반환의 조건으로 나고시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합의한다는 1996년 4월의 SACO합의가 갑자기 나고시 헤노코 신기지 건설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1996년 4월 갑자기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1997년 1월부터 헤노코 주민의 농성과 감시행동이 시작되었다. 그 해 12월 나고시 주민투표에서 기지건설반대가 정부(방위시설국)측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2004년 4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몸을 던진 해상 행동에서 보링조사라는 명목의 해상기지건설 착공을 완전히 저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해상에서 연안부로 활주로의 위치를 조금 옮긴 설계도에 따라 새롭게 환경 영향평가 조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해역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주공을 쫓아 내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법한 조사방법이라는 환경영향심사회 등의 비난이 일어났고, 정부의 위법한 영향평가에 대해 나하 지방재판소에 소송이 제기(2009년 8월 19일)되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타카에》

타카에를 둘러싼 미군기지인 북부연습장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글전을 위한 전투훈련시설로서 1998년에는 「정글 전투훈련센터」라 이름을 바꾸며, 해병대 서바이벌 훈련이나, 헬기의 이동 매달림 훈련, 모의탄을 사용하는 사격훈련 등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1996년 SACO합의에 의한 북부훈련장 일부 반환을 조건으로 바다로부터의 침입로를 갖춘 새로운 헬기 패드를 타카에 마을을 둘러싸듯이 6곳에 건설한다는 계획이며, 틀림없이 헤노코에 배비예정인 오스프레이(MV22 Osprey)가 사용하는 훈련시설이 될 것이다.

암바루 흰눈썹부기나 노구치게라 등 멸종 위기종이 그 곳에서만 서식하여, 세계적인 자연보호 기관인 IUCN이나 WWF가 보호 권고를 낼 만큼 귀중한 동식물의 보고를 미군기지로 파괴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2007년 7월부터 매일 농성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3. 기타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를 둘러싼 문제

미군에 의한 피해는 오키나와 전쟁으로부터 64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지기만 하고 있다. 지상전에서 전쟁터가 된 오키나와에 있어서 전쟁은 다른 형태로 64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지로 의한 피해는 가테나의 전투기폭음, 차탄의 반환지 PCB오염, 캠프 한센의 산불, 후텐마의 헬기 추락, 그리고 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등 흉악사건 등 헤아리면 끝도 없을 정도다.



4. 맺는 말

오키나와에 있어서 올해는 1609년의 사츠마에 의한 류큐 침공으로부터 400년을 맞이하여, 류큐(오키나와)가 독립을 빼앗기고 민중이 압제와 수탈에 고통 받아온 역사를 재인식하는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명치유신을 계기로 일본이 천황제국가로서 부국강병(富国強兵)으로 달린 첫 번째 침략출병이 1879년의 류큐처분(류큐국을 폐지하여, 일본 판도에 「오키나와県」으로 편입했다)이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식민지 지배, 중국 침략전쟁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다.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해 짓밟힌 동아시아 민중들에 있어서 공통된 과제인 「평화, 인권, 환경」을 주제로 제2회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이 미군의 국제적인 재편을 둘러싸고 요동치는 오늘날의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민족적 억압이 상승되어 온 역사에 끝을 맺고 전쟁에 의해 민중이 희생될 일이 없는 내일을 위해, 국경을 넘는 서로의 연대를 보다 넓히며, 이해를 깊어가면서 함께 손을 잡아 나아갑시다.

주일 미군기지 문제점

야기 류지 (포럼 평화인권·환경 - 평화포럼)

1. 주일미군의 개요

(1) 주일미군 병사

주일미군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인의 숫자는 육군 2천명, 공군 1만 3천명, 해군 1만 9천명, 해병대 1만 6천명 등 약 5만 명이다. 또한 이 지역에 미국 국방성 군속 5,400명과 군인·군속의 가족 5,400명이 일본에 살고 있다. 일미간에는 주일미군병사의 숫자를 정한 계약은 없다. 미국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병사의 숫자를 늘이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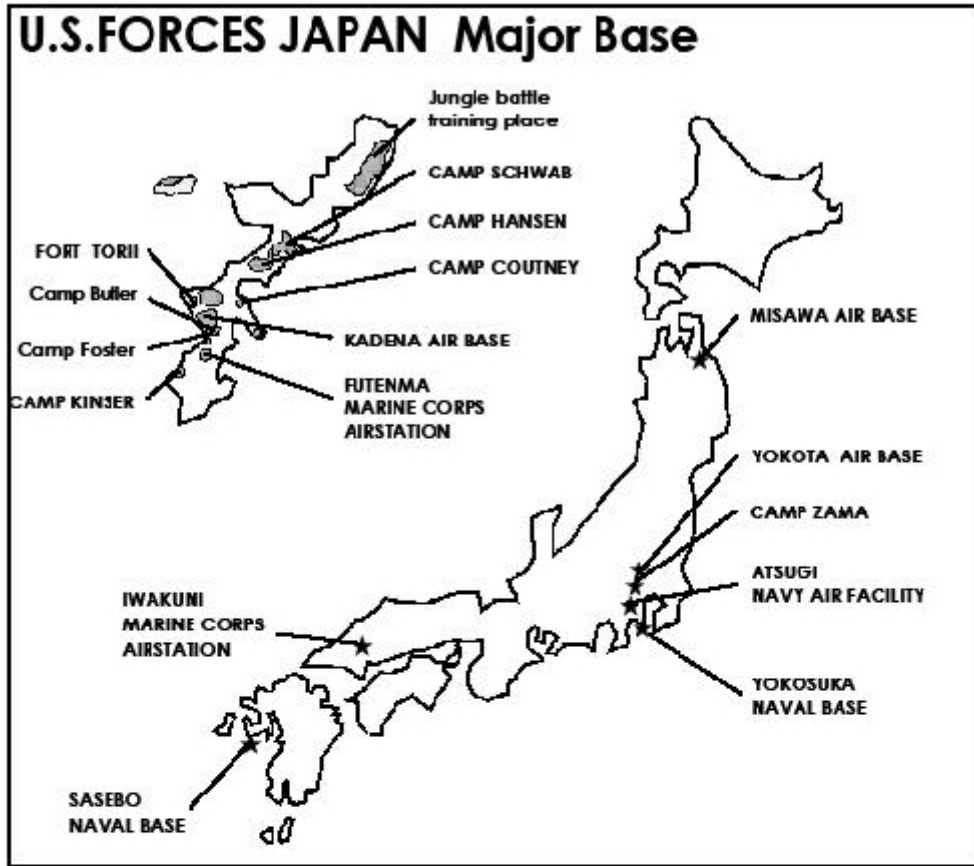
2006년 5월 1일, 일미 양 정부는 워싱턴 DC에서 일미안전보장협의회(2+2) 회의를 개최하여 주일미군 재편에 대한 합의문서 「재편실시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해병대에 대해 ① 2014년까지 해병대원 8천명과 가족 9천명을 콰트로 이전한다. ② 이전을 위해서 콰에 건설하는 신기지·부대숙소·가족주택 등의 총비용 107.2억 달러 중, 60.9억 달러를 일본이 부담한다 - 등이 포함되었다. 2009년 2월 17일에는 오바마 행정부 아래 국무장관에 취임한 힐러리 클린턴이 일본을 방문하여 나카소네 외무성 장관과 회담하여 ‘해병대 콰 이전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협정의 승인에 관한 국회 심의 중에서 사민당과 민주당의 추궁에 의해 정부는 해병대의 삭감은 ‘실수(実数)’가 아닌 ‘정수(定数)’인 것을 인정했다. 즉 미국측이 해병대의 ‘정수’를 1만 8천명에서 1만명으로 하는 것이며, ‘실수’로 몇 명 삭감될지는 불분명한 것이다.

(2) 주일미군 시설

일본 정부가 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설은 85곳(본토 52곳, 오키나와 33곳)으로 면적은 309km²(본토 80km², 오키나와 229km²)이다. 그 외에도 미군은 자위대가 보유하는 시설 중 49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MISAWA AIR BASE (AOMORI)
 >Air Forces 35th Fighter Wing
 (F16 2-squadron)

YOKOTA AIR BASE(TOKYO)
 >HEADQUARTERS,USFJ
 >Commander U.S. Air Forces
 Japan/5th Air Force
 >374th Airlift Wing

CAMP ZAMA(KANAGAWA)
 >Commander U.S. Army Japan
 > I Corps (Fwd)

**ATSUGI NAVY AIR FACILITY
 (KANAGAWA)**
 >Carrier Air Wing FIVE
 (F/A18 4-squadron EA6B E2C C2)

**YOKOSUKA NAVAL BASE
 (KANAGAWA)**
 >Commander,Naval Forces,Japan
 >7th Fleet
 >nuclear-powered carrier / 1
 >Aegis/ 9
 >amphibious command ship/ 1

**IWAKUNI
 MARINE CORPS AIRSTATION
 (YAMAGUTI)**
 >12th AIR WING (F/A18 4-squadron)

SASEBO NAVAL BASE(NAGASAKI)
 >Navy 7th Fleet
 >amphibious ship/ 4

● OKINAWA ●
CAMP SCHWAB
 >4th Marine Regiment

CAMP HANSEN
 >12th Marine Regiment

CAMP COURTNEY
 >Commander 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
 >3rd Marine Division

Camp S D Butler
 >Marine Corps Bases, Japan.

Camp Foster
 >Commander 1st Aircraft Wing

CAMP KINSERMC
 >3rd Marine Logistics Group

**FUTENMAMC
 MARINE CORPS AIR STATION**
 >1st Aircraft Wing

KADENA AIR BASE
 >Air Forces 18th AIR WING
 (F15 2-squadron)

FORT TORII
 >Army 1stSOF

일미안보조약과 일미지위협정 등의 규정에 의해서 일본은 미국에게 무상으로 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본토에 있는 미군기지의 대부분은 전쟁 종결 전 일본군이 기지로 사용했던 곳의 토지이며, 현

재에도 일본 정부의 재산이다. 따라서 토지의 임대료는 필요없다.

반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의 대부분은 미군통치 시대에 미군이 주민으로부터 수용한 것이며 토지 권리 소유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미군기지의 토지 주인에게 토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오키나와 타임즈」의 기사(2006년 1월 10일)에 따르면, 미군기지에 토지를 제공하고 있는 군용지 주인은 약 3만 3천명으로 2003년도의 땅 임대료는 770억 엔이라고 한다.

(3) 배려 예산

일미 정부간 결정에서 미군의 주둔경비는 미국의 부담이다. 하지만 1978년 이후, 일본정부는 주둔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것이 ‘배려 예산’이다. 2008년도의 ‘배려 예산’은 2083억 엔이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액수는 5조3710억 엔에 달한다. ‘배려 예산’은 기지내 종업원의 급여, 기지의 광열/수도비, 부대숙소와 가족주택의 건설비 등에 사용되고 있다.

2. 주일미군 부대의 특색

(1) 항공모함과 해병대의 해외 전개지

① 해군 …… 유일한 항공모함의 해외 모항(母港)

미해군은 1973년 이래, 요코스카 기지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있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해군이 보유하는 유일한 항공모함의 해외 모항이다. 현재는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배치되어 있다. 미해군은 10척의 원자력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에 모항이 있는 것은 조지 워싱턴 1척이다. 또한 제7함대에 소속된 이지스함 9척도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두고 있다. 이지스함 중 5척은 SM-3미사일을 탑재한 미사일방어 대응함선이다. 그 밖에 사세보 기지에는 해병대가 상륙작전에 사용하는 양륙함 4척이 배치되어 있다.

② 해병대 …… 제3해병 원정군의 전개

오키나와에는 제3해병 원정군의 사령부와 산하의 실전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미해병대는 3개의 원정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외에 전개하고 있는 것은 제3해병 원정군뿐이다. 오키나와에 있는 북부훈련장은 해병대가 보유하는 유일한 정글 전투훈련장이며 미국 본토로부터 파견된 해병대 부대가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이와쿠니 기지에는 해병대의 전투기 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③ 공군 …… 아시아 태평양지역 전역에 전개

주일 미공군은 요코타 기지, 카테나 기지, 미사와 기지 세 곳의 항공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요코

타 기지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공수의 중심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카테나 기지에는 F-15 전투기 대대가 2개 배치되어 있다. 또한 한국의 평택 오산공군기지와 미국 본토로부터 빈번하게 공군기가 날아다니며 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과 핵개발을 감시하기 위해서 RC135U 탐정기, RC135W전자탐정기, RC135 대기수집기 등, 특수한 임무를 띤 항공기가 날아다니고 있다. 2007년 이후는, F-22 전투기의 일시적 배치가 종종 있었다. 미사와 기지에는 F-16 전투기 대대가 2개 배치되어 있다.

④ 육군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창고

주일 미육군에는 대규모의 전투 부대는 배치되어 있지 않다. 육군이 보유하는 주된 시설은 사가미 종합보급창고이다. 여기에는 미 육군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 데에 필요한 군수 물자가 비축되어 있다. ※ 오키나와의 캠프 토리이에 기지 경비의 명목으로 육군 특수부대(그린 베레) 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2) 주일미군과 ‘극동조항’

주일미군의 특색은 항공모함과 해병대의 전방 전개 기지라는 점이다. 2003년의 이라크 침공에는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항공모함 키티호크가 참전하였고 함재기 부대가 바그다드를 공폭하였다. 그리고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는 이지스함 카우펜스는 이라크에 대하여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를 발사한 최초의 함선이다. 제3해병 원정군은 장기간에 걸쳐 부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하였다.

일미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극동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서 미국합중국은 그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의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는다’고 쓰여 있다. 이것은 주일미군의 활동 범위를 일본과 극동에 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일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이라크 침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주일미군이 일미안보조약에서 이탈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3. 주일미군의 문제

(1) 다발하는 미군 관련 사건·사고

군인·군속·가족에 의한 사건과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에서 성폭력·살인까지 포함한 발생건수는 2002년 1994건, 2003년 2079건, 2004년 1866건, 2005년 1755건, 2006년 1549건입니다.

2008년 2월에는 오키나와 차탄정에서 해병대 병사가 여중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3월 23일에는 지역의 어린이회와 부인회의 호소로 6천명을 넘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4월 14일, 15일 이틀동안 오키나와 의회 의원과 시·구·동장 등이 상경하여 일본 정부와 미국 대사관에 대해 요청 행동을 하였다.

미성년의 소녀가 미군병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1995년 9월에 3명의 미군 병사가 12살의 여 초등학생을 유괴하여 성폭력 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군 병사는 렌터카를 사용하여 접촉 테이프로 소녀의 눈과 입을 막아 유괴했던 것이다. 오키나와 경찰은 체포장을 발부하여 미군에게 병사 3명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지만, 미군은 지위협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지위협정에는 미군 관계자가 사건이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공무중인 경우 미군측에, 공무 외인 경우 일본측에 재판권이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공무외의 경우라 하더라도 용의자의 신변을 미군측이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기소 후에 일본측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건 직후, 미 태평양군의 리차드 막키 사령관은 ‘렌터카를 빌리는 돈으로 여자를 살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을 샀다. 미군의 대응에 대한 격노의 목소리는 커져, 10월에는 기노완시에서 8만 5천명이 참가한 항의집회가 열렸다.

사건을 계기로, 당시의 무라야마 정권은 미국 정부와 교섭하여 살인과 여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미군측이 조기에 인도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건·사고는 감소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성폭력 외에도 2006년 1월에 요코스카에서 해군병사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2008년 4월에는 요코스카에서 해군병사가 택시 운전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미군함선에 의한 방사능 유출 사고

2008년 7월 일본에도 자주 기항하는 원자력 잠수함 휴스턴이 방사능 유출 사고를 일으킨 일이 판명되었다. 사고에 관한 미 해군의 최종보고서에는 “잠긴 밸브에서 방사능을 포함한 냉각수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방사능이 유출된 것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2년간, 냉각수에 들어있던 방사능은 코발트, 유출된 방사능량으로는 인체·해양생물·환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기재되었다. 그러나 방사능 유출을 일으킨 밸브가 함선의 어느 위치의 것인지, 왜 밸브에서 방사능이 나왔는지, 방사능이 인체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 중요한 것은 쓰여 있지 않았다.

1964년 원자력 잠수함 Sea Dragon이 사세보 항에 기항했다. 미 해군의 원자력 함선이 일본에 기항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다. 방사능 유출 등을 우려하는 일본에 대하여 미국은 ‘Aid Memoir’를 발표하여 원자력 함선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원자력 항공모함의 모항으로써 요코스카를 사용할 즈음에는 ‘합중국 원자력 군함의 안전성에 관한 Fact Sheet’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여 미해군의 원자력 함선이 방사능 유출을 일으킬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휴스턴 방사능 유출 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는 충분한 설명은 없었고, 일본 정부 또한 독자적인 조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의 설명을 받아들이기만 했다. 휴스턴은 방사능 유출 기간 중에 나가사키의 사세보 기지에 5번, 가나가와의 요코스카 기지에 1번, 오키나와의 화이트 비치에 5번 기항했습니다. 이들 기지가 있는 지자체의 리더는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더욱 더

가지게 되었다.

4. 주일미군 재편에 의한 변화

일미 양 정부는 2005년 이후,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여 4개의 합의 문서를 발표했다. 「공동발표」(2005년 2월 19일)에서는 일미 공통적 전략 목표를,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2005년 10월 29일)에서는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임무·능력을, 「재편실시를 위한 미일의 로드맵」(2006년 5월 1일)에서는 구체적인 주일미군기지의 재편을, 「동맹의 변혁: 미일의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의 진전」(2007년 5월 1일)에서는 최종적인 합의를 - 각각 확인했다. 이들 합의에 의해서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크게 변화했다.

(1) 일미 사령부 통합

주일 미공군사령부는 요코타 기지에, 항공자위대와 항공총대 사령부는 후츄 기지에 있다. 주일미군 재편으로 2010년까지 항공총대 사령부를 요코타 기지로 이전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미공동 통합운용 조정소를 설치하여 방공과 미사일 방어에 관한 조정을 하게 된다. 주일미육군사령부는 캠프 자마에 있다. 주일미군 재편에서는 육군자위대·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캠프 자마에 이전시킨다. 중앙즉응집단은 해외파병이나 전시의 긴급전개 전문부대로써 신설된 것이다. 주일 미해군사령부와 해상자위대·자위함대 사령부는 지금도 요코스카 기지에 같이 주둔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에 의해서 미일의 육·해·공 3군 모든 사령부가 통합하게 된다.

(2) 미군에 의한 자위대 기지 사용

주일미군 재편에서는 공군 카데나 기지, 공군 미사와 기지, 해병대 이와쿠니 기지에 소속된 전투기의 훈련을 항공자위대의 치토세 기지, 하쿠리 기지, 코마츠 기지, 뉴타바루 기지, 츠이키 기지 등 5곳으로 이전기로 합의했다. 또한 1997년 이후 캠프 한센에서 행해졌던 해병대 포병연대의 포격연습이 야우스베츠 연습장, 오조지하라 연습장, 히가시후지 연습장, 기타후지 연습장, 히쥬다이 연습장으로 이전되어 행해졌다.

(3) 미군에 의한 민간항만의 사용

주일미군 재편의 합의 이후,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미군함선에 의한 민간항만의 사용이 있다. 주일 미해군은 요코스카 기지, 사세보 기지, 화이트 비치 등 전문적인 군항을 가지고 있다. 1997년에 체결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신-新-가이드라인)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 주변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에 대하여 민간항만과 민간공항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로 인해 미해군의 함선이 민간항만에 입항하는 사태가 증가했다. 게다가 주일미군 재편합의 이후에는 2006년-28

척, 2007년-28척, 2008년-20척으로 증가하고 있다.

(4) 새로운 기지 건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기노완시에 있는 해병대 후텐마 기지를 폐쇄하는 대신에 오키나와 나고시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할 것을 미국에 약속했다. 새로운 기지 건설은 1972년 오키나와 본토 복귀 후 처음이다.

주일미군 재편의 목적은 미국이 아프리카대륙 동쪽해안에서 동북아시아에 걸친 지역(불안정한 활모양의 지역-Unstable Arc)에서 군사개입을 할 경우에 일본 전체를 출격기지로서 사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서의 군사 파트너인 자위대를 미군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일미 관계는 미국이 상위이고 일본이 하위인 불균형적인 동맹이었다. 또한 지위협정에 의해 주일미군은 치외법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은 일본과 자위대를 하위의 파트너로서 단정하고 미국과 미군에 한층 더 종속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미군기지의 축소·철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기지 소음피해 현황과 과제

- 군산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구중서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1. 주한 미군기지 - 비행장, 사격장 현황

100여개 이상의 기지, 시설, 훈련장이 있던 주한 미군기지는 2002년, 2004년 체결된 기지 이전 협정에 따라 재편되고 있다. 미국 국방성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 현재 한국에는 87개의 시설, 33,596에이커의 땅을 이용하고 있다.

소음피해를 발생하는 비행장, 사격장을 살펴보면, 미군의 주요 공군기지로서 군산 공군기지(Kunsan Air Base)와 평택 공군기지(Osan Air Base, K-55)가 있고, 육군기지의 경우 평택 캠프 험프리 헬기부대, 경기도 성남 비행장(K-16)이 있다. 미국 공군은 한국 공군기지인 수원, 청주, 광주, 예천 공군기지에 미군 시설을 두고 있다.

사격장으로는 강원도 영월 필승 사격장과 군산시 옥도면 직도 사격장, 경기도 포천 영평 사격장이 있으며, 14개의 소형, 직사포/곡사포사격장이 운용중이다. 지난 2005년 폐쇄된 매향리 미공군 국제 사격장(Kooni Range)은 54년간 미군 전용사격장으로 이용되었으며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 훈련피해를 주었고, 주민들은 사격장이 폐쇄된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2.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형태와 주민피해

1) 미군비행장, 사격장 소음형태

군용기와 사격장 소음은 충격음이 강하고, 불규칙적으로 발생한다. 전투기의 경우 소음의 지속시간 및 변화 정도는 작으나 넓은 범위에 고주파수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헬기의 소음은 몸체 상부에 위치한 날개와 꼬리부분의 날개가 회전하면 발생하는 소음으로 전투기보다는 소음은 적지만 지속시간 길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군사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의 원인인 전투기의 특성과 군사훈련의 방법, 시간 등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진다. 미군비행장의 경우 주민들은 전투기의 이륙, 착륙, 선회 및 T&G(Touch & Go) 등의 훈련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미군비행장을 이용하는 군용기는 일정한 시간과 패턴을 가지고 비행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주/야간으로 갑작스러운 소음에 노출될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군용기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와는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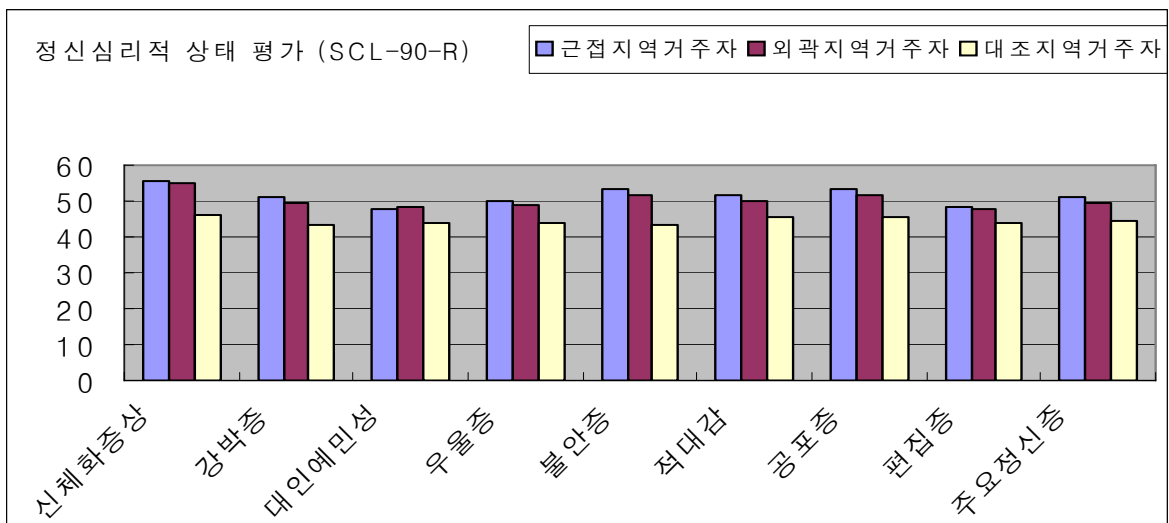
사격장의 경우 110dB이상의 충격소음이 발생한다.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지속시간이 1초 미만으로 짧고 저주파수라는 특징이 있다. 저주파수는 6~200Hz 음역으로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몸은 진동과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저주파소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때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저주파는 고주파수에 비해 건물이나 창문이 흔들리는 강한 진동을 유발한다.

2) 주민 피해

소음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 전달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각공해로 구분된다. 하지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그 피해가 밝혀지기 어렵다. 소음은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와 더불어 작업장의 사고, 작업능력저하,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

미군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는 2002년 군산, 대구, 춘천지역과 2006년 평택, 2008년 매항리에서 각각 조사되었다. 2009년에는 군산지역에서 건강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 조사는 민간단체나 연구소, 지자체에서 진행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건강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다.

그림1. 스트레스 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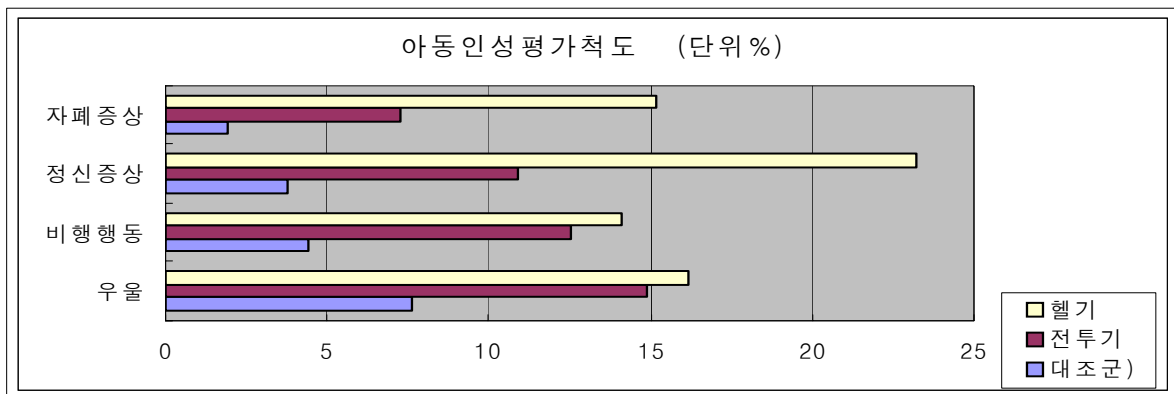


2002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군산, 대구, 춘천지역 미군 비행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 기지 주변 지역 주민 10명 중 3명이 의사 진단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청력의 경우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청력수준은 대조지역에 비해 거의 모든 주파수대에서 10dB 이상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불임률도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은 지역에 비해 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에서는 군용기 소음에 노출된 아동(초등학생 4학년~6학년)에 대한 건강조사가 최초로 진행됐다. 헬기를 운영하는 육군기지(캠프 험프리 Camp Humphrey)와 전투기를 운영하는 공군기지(Osan Air Base)가 있는 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헬기 소음이 전투기 소음보다 아동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2. 2006년 평택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조사 아동 인성 평가 척도



매향리 사격장은 2005년 폐쇄되기까지 54년 동안 미군 전용 국제사격장으로 사용되었다. 미군 기지 소음 소송을 최초로 제기하여 결국 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매향리의 경우 사격장이 폐쇄된 후에도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폐쇄된 지 2년 후인 2007년부터 1년간 민간 연구소가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자살률은 한국 평균보다 2~7배 높았으며, 주민 10명 중 3명이 의사의 상담이 필요한 고도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주민은 각각 6.9%, 15.81%로 역시 다른 지역주민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매향리 주민들은 청력이상이나 임신 초기 유산·식욕부진·기억력 감퇴·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3. 군산 미 공군기지의 전략적 변화와 소음

군산 미 공군기지는 군산시내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F-16전투기 60여대(미 공군40여대, 한국공군 20여대)를 운용하고 있다. 기지에서 서쪽으로 40Km 떨어진 섬 직도에는 미군의 폭격장이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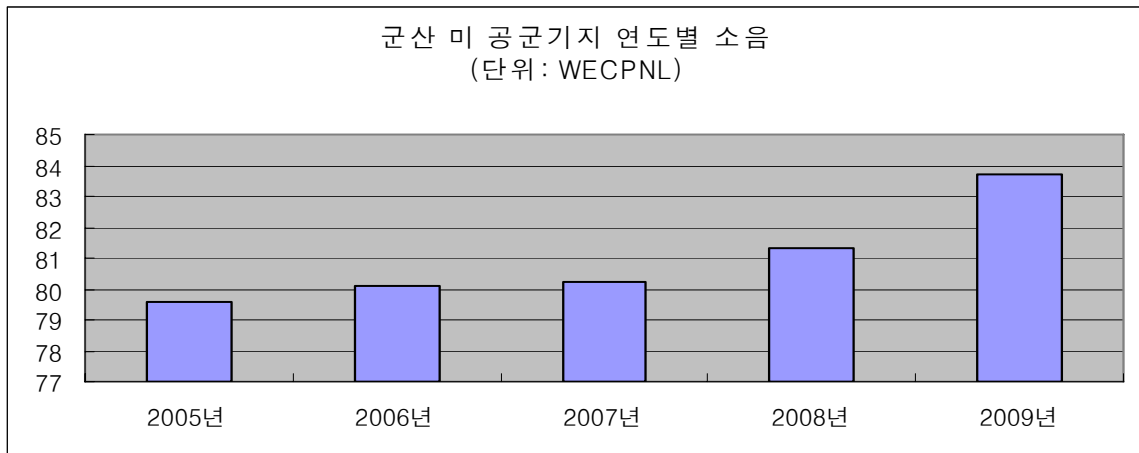
직도는 103,540㎡(3만 1376평)의 작은 무인도로 소직도와 대직도로 나뉘어져 있다. 이곳은 1971년부터 한국 공군 사격장으로 조성되어 실무장 폭격훈련을 하였고 미군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2005년 매향리 폭격장이 폐쇄되면서 미군은 직도폭격장에 자동채점장치(WISS)를 설치하여 폭격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2006년~2007년 WISS가 설치된 이후 군산 공군기지에는 해외 주둔 미공군 전투기들의 순환배치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07년 6월 이탈리아 주둔 아비아노 공군기지에서 날아온 F-16 전투기들의 4개월 순환배치 훈련, 2008년 1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소공군기지에서 날아온 F-16 전투기들의 4개월 순환배치 훈련이 있었고, 2008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한국과 미국 공군들이 'MAX THUNDER'라는 이름의 연합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참가한 미국 공군들은 군산기지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괌, 미국 본토인 아이다호주 공군기지에서 참가하였다. 2009년 8월에는 미 본토 아이다호주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F-15 전투기들이 5개월 순환배치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순환배치 되는 전투기들로 인해 군산미공군기지의 전투기 수는 60여대에서 80여대로 증가했다. 전투기의 증가는 훈련량의 증가를 동반하고 이는 주민소음피해에 직결된다. 해외주둔 미군은 군산기지에 들어와 지형숙지 훈련을 하기 위해 기지 인근은 물론 주거 밀집지역, 군산시 중심부 등을 비행하고 있어 소음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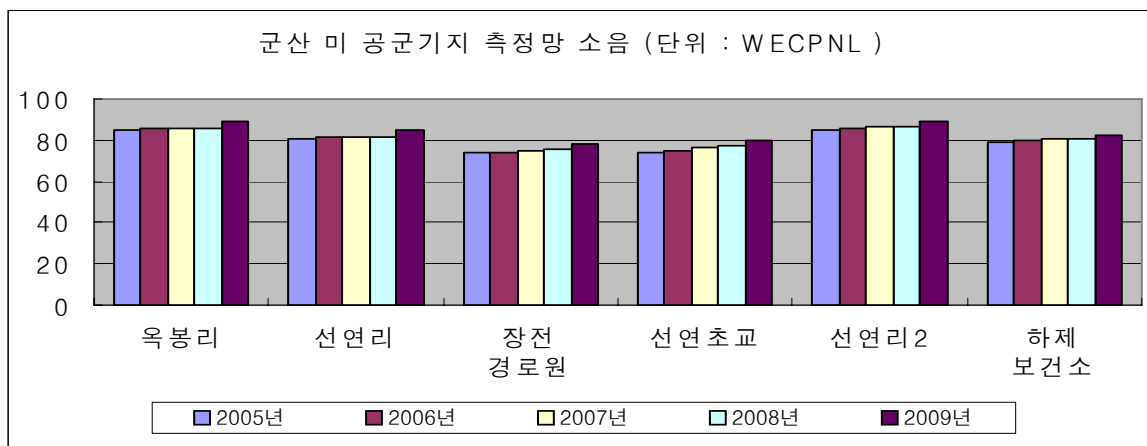
전투기수 증가로 인한 소음의 증가는 동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에서 약 1.5km 떨어진 토끼사육장에서는 순환배치로 인해 훈련량이 많아지면서 2008년 한 해 동안 5차례에 걸쳐 토끼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 피해 주민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지만 “주한미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없다”며 주민피해를 외면하였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피해 주민이 배상을 받도록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는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3. 군산 미 공군기지 연도별 소음



※ 자료 출처 : 환경부. 2009년 소음측정값 1/4분기까지 공개.

그림4.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측정망 연간 측정값



※ 자료 출처 : 환경부. 2009년 소음측정값 1/4분기까지 공개.

4. 주한미군 소음 피해 해결을 위한 제언

2006년 주한미군은 군산시에 직도폭격장 WISS 설치를 승인받으면서 밤 9시 이후 야간 비행을 하지 않고, 내륙비행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08년 7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 소속 제2전투항공여단 여단장은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헬기의 이륙, 착륙시에 해발 228m의 고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25일 평택 캠프 험프리(K-6)인근 송화2리 마을 위를 저공비행하던 치누크헬기(CH-47)에 의해 12채의 가옥의 뒷 벽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미군의 약속 불이행이다.

미군이 한 약속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 생기는 최소한의 대책이다.

그러나 이런 약속도 미군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훈련 강화 계획은 세우지만 그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는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 미군 비행장,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정책 마련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소음저감 대책과 주민피해 구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미국내 기준이라도 지켜져야 한다.

주한미군 내부 규정인 환경관리기준(EGS)에 있는 소음 규정에는 미군항공기나 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대책은 없다. 미국내에서는 군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항공시설 적정사용지역 프로그램, 시설운영소음 관리계획, 공동 토지 이용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미국내 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런 기준이 해외에 있는 기지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와 관련하여 일미 합동위원회 아래에 “항공기소음대책 분과위원회”가 있어 토의라도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주일미군환경관리기준(JEGS)의 소음 규정에도 한국처럼 미군 항공기와 군함을 예외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가 주민피해를 구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도 소음대책과 관련해 미군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에 소음 조항을 신설하여 소음대책의 수립과 시행, 주민피해 구제와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한다.

2) 체계화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소음 저감대책 마련

현재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피해 지역의 주택과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대책 논의는 없다. 소음원에 대한 대책없이 현재 방음시설만으로는 결국 집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다. 방음시설 설치와 함께 소음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소음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각 기지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를 통해 소음원이 되는 군용비행장, 사격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선 운항방식이 개선이 필수적이다. 운항방식은 비행경로, 비행고도, 비행시간, 이·착륙방식 등을 조정해 소음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야간 비행 중단, 내륙선화·비행훈련의 중단, 전투기 운항시 고도제한, 이·착륙 방식의 개선 등의 방식이 있다.

이것 외에 전투기 엔진 개조, 전투기 이동방법의 변경, 엔진테스트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를 위해 정비고(허쉬하우스)설치, 방음림, 차음벽 설치 등을 통해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거지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격장의 경우에도 소음이 이동하는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을 정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3) 피해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 대책 마련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조사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나온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도 없고, 민간과 지자체의 조사 결과에 대한 대책의 수립도 없다. 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기지가 폐쇄되어도 피해가 지속된다는 것을 매항리 사격장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미 양 정부는 미군비행장과 사격장 인근의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해야 한다.

4) 소음원인 제공자인 미군의 책임

미군은 미군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태도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소음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하였고, 대법원에서 미군의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은 위법한 것이며 주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현재까지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인정된 확정판결은 매항리 사격장, 군산미군비행장 등 5건이며, 배상금은 한국정부에서 지급한 상태이다. 미군은 SOFA 제5조 제2항을 핑계로 들며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SOFA 제23조에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는 미국이 보상해야 하며,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이라 양 국가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미군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억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군 당국에게 여러차례 소음피해 배상금을 요구하였지만 아직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외 주둔 미군들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고 이를 배상해야 한다.

요코다 기지 공해소송과 환경안전보장

하야시 키미노리 (일본 학술 진흥회 특별 연구원 PD)

1. 들어가며

냉전종결 후, 세계의 군사비는 1996년까지 30% 이상 삭감되었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9·11' 이후 미국의 군비확장은 엄청나고 냉전종결 후에도 군축은 실현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만 본다면, 억지 정책에 의한 '평화'의 실현은 평가할 만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군비확장을 정면에서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지구환경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군사 활동을 검증하면, '평화'라 하더라도 군축이 필요한 이유가 표면에 드러난다.

군사 활동은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오염, 자연파괴, 쾌적한 삶의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자원의 소비를 통하여 지구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을 주고 있다. 지구 전체를 파괴할 만한 원자폭탄 등의 무기가 만들어지는 현대에 있어서, 군사 환경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지구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허용될 수 없다.

군사 환경 문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전쟁터이며 군사 환경 문제에 의한 심각한 피해가 일반인에게도 주목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군용기 소음을 비롯한 군사 환경 문제는 군사기지 주변에서 평소에도 발생하고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평시의 군사 환경 문제는 1) 심각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2) 기지 주변의 주민이 주요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전시의 군사 환경 문제와 성격을 달리한다. 평시 군사환경 문제의 고유한 성격을 고려하면, 군사 활동에 의한 국가안전보장 정책의 문제점이 부각된다. 평시의 군사 환경 문제의 피해자는 군사 활동에 의한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의해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 기지주변 주민이다. 이것은 많은 비용을 할애하여 무제한으로 거대화·고도화되어 가는 군사 활동에 의한 국가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군축을 통한 군사 환경 문제의 개선을 지향하는 데에, 평시의 군사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갈지가 아주 중요해 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대처로서, 본 보고에서는 요코

타 기지 공해소송을 주제로 채택했다.

아즈키, 코마즈, 카데나, 후텐마에 앞서 소송이 제기된 요코타 기지에 초점을 맞춰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이 평시의 군사 환경 문제의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봄으로써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군사활동을 평시에 되묻는 것의 의미를 명확히 하겠다.

2.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

2-1. 개요와 특수성

요코타 기지는 신주쿠 부도심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0킬로미터의 장소에 있는 미군기지로, 홋사시, 아키시마시, 하무라시, 타치카와시, 무사시, 무라야마시, 미즈호정 등 5개 시와 하나의 정(丁)에 걸쳐있다. 요코타 기지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전투기의 출격기지가 되었기 때문에 1950년 이후, 주변 주민은 심각한 소음피해를 줄곧 받아왔다. 1971년부터 2005년까지의 아키시마시 시청 부근의 소음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 표1이다. 베트남전쟁 때의 격렬한 소음에 눈이 가지만, 소송판결에서 수인한도(受忍限度)를 초과한다고 여겨지는 소음이 200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 방위시설국의 정보를 토대로 추산하면 소음피해 경감 후인 2005년 10월 20일에 고시된 신 콘타(등음선等音線)에 있어서마저 75W이상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약 5만 명에 이른다.

표 1. 요코타 기지의 군용기 소음 횟수의 변화 (1971년 ~ 2005년)

연도	총회수	22~6시 회수	토일 회수	90dB이상 회수	W치	사건
1971	32019	n.a.	n.a.	22841	n.a.	베트남 전쟁 중
1976	13690	871	1810	3925	n.a.	구(旧) 소송 제기
1980	13586	515	2111	4882	n.a.	
1985	11843	110	1989	3537	n.a.	
1990	12085	204	1696	3245	85	
1995	11100	69	1208	2036	80	94년 구(旧)소송 확정. 96년 신(新) 소송 제기
2000	8470	13	828	850	80	02년 대미(対米) 소송 최고재판 판결
2005	6864	51	671	453	76	신(新)소송 고등재판 판결. 07년 최고재판 판결

출처) 아키시마시 『요코타기지 항공기 소음 조사결과』 연도별 문헌 참조

주) 표에서 W란 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가중 등가 계속 감각 소음 레벨) 의 약칭이다. WECPNL이란 일본의 환경기준에 채용된 항공기 소음의 지수이며, 항공기의 소음레벨에다가 관측된 하루 기준의 소음횟수에 발생 시간대에 의한 가중을

가미시킨 것이다. ‘시끄러움 지수’ 라고도 불린다. 요코타 기지 공해 소송에서는 75W이상의 지역에서 수인한도를(受忍限度)를 넘는 피해가 인정되고 있다.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미즈호정이나 아키시마시에서는 1950년 당시부터 소음경감에 대한 의회 결의나 정부에 대한 요청을 해 왔다. 그러나 요코타 기지 주변에 있어서 군용기 소음에 본격적으로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73년 8월 소음피해로 집단 이전한 철거지에 자동 착륙 유도장치가 설치되어 기지 확장이 이뤄지려고 했던 때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군기지 또는 관련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주민이 많아 운동은 곤란을 겪으며 더 발전하지 못했다. 또한 미군에게는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러한 속에서 큰 영향을 준 것이 1972년 9월에 미노베 도지사가 제소한 요코타 기지내 도유지(都有地) 반환소송과 1975년 11월의 오사카 공항 고등재판 판결이었다. 전자는 기지의 소음이 도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요코타 기지 활주로 밑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都) 수도용지를 도가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지금까지 주민이 미군을 피고로 제소하는 데 있어서 알레르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후자는 민간공항에 대한 소송이었지만 소음에 의한 피해를 없애기 위한 소송으로 손해배상과 소음금지가 인정됨으로써 피해 구제라는 시점으로부터 소송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가졌다.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이 당시의 기지반대 재판투쟁(스나가와 사건, 에니와 사건, 나가누마 나이키 사건)과 결정적으로 달랐던 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실제의 피해를 근거로 한 소송을 제소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 9조로부터 안보조약과 행정협정, 자위대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로부터 그 정당성을 물었던 것이다. 실제 피해로부터 현재의 법제도를 검증하는 방법은 오사카공항 소송과 미나마타병 소송을 비롯한 공해소송의 전형적인 방법이었다. 그 의미에서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은 사건이라는 고도로 정치적인 면을 가지지만, 전형적인 공해소송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고도의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고도의 수인한도(受忍限度)가 무조건 인정되어 왔던 군사 활동에 대해 환경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한 점에서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은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2-2. 성과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의 성과로써는 1) 군사 환경 문제에 의한 피해의 실태를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히 한 점 2) 미일 양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 3) 군사 활동에 일정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실현한 점. 크게 나눠 이상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1976년 4월에 제소된 구(舊)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구소송)에서는 소송의 변론을 통해 피해의 실태가 확실히 드러났다. 판결에서 인정된 소음피해는 수면장애, 심리적/정신적 피해(신경질적이고 불쾌하다), 귀울림, 두통, 어깨뭉침, 어지러움, 위장장애, 고혈압, 심장 두근거림, 호르몬계에의 영향, 일상생활의 장애 (회화/전화 청취 방해, 사고의 중단과 독서 방해 등)이며 다방면에 걸친 인권

침해가 밝혀졌다. 1996년 4월에 제소된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신소송)에서는 약 6천명의 원고가 피해를 호소하여, 미일 양 정부를 움직이는 큰 요인이 되었다.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의 두 번째 성과는 미일 양정부의 책임을 밝힌 점이다.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에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신구소송을 합쳐서 8번이나 그 위법성이 인정되고 있다.

요코타 기지 공해소송의 세 번째 성과로서, 군사 활동에 일정의 규제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구제를 실현한 점을 들 수 있다. 어떠한 판결에서도 주민의 비원인 야간새벽 비행금지 인정되지 않았지만, 소송의 영향을 받아 미일 양 정부는 군용기의 비행횟수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피해구제에 관해서도 모든 판결에서 과거의 피해보상이 인정된 점, 구(旧)소송 지방재판 판결 이후 배상금액이 점점 증액되어 간 점 등으로부터 일정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이 점에 관해서 말하면, 장래분의 피해보상이 인정되지 않고 또한 항구적인 피해구제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 중대한 문제 또한 남아있다.

3. 환경안전보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 생태계의 붕괴, 자연자원의 고갈은 인간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러나 군사 활동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은 그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 오히려 군용기 소음을 비롯한 군사 환경 문제에 의해 군사 활동은 환경을 철저히 파괴한다. 이러한 현 실태를 보는 한, 냉전시대에 발생한 군사 활동에 의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전통적인 안전보장개념은 현대에 있어서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1) 안전보장의 내용을 군사적인 위협에서 비군사적인 위협(자원의 고갈, 기후변동 등의 환경문제) 또한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장해 갈 것 2) 적국이 존재하지 않아도 위협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3) 안전보장의 범위를 국가에서 인간(집단 및 개인)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 가는 것 이라는 특징을 갖는 환경안전보장이 종래까지의 안전보장 대신 바뀔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군축을 실현하고 비군사적인 수단에 의해 새로운 안전보장을 실현해 가는 것은 환경보전과 평화실현의 측면에서 보아도 지금 이 세기의 최대의 과제이다.

* 본 보고는 일본 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장려비(21·4066)의 조성을 받은 것이다.

동아시아 기지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맞이하여

이토카즈 케이코 (일본 참의원 의원, 오키나와 요미탄)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 등의 군대 활동에 의해 초래되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의 영향을 조사하고 그 방지책과 환경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는 이번의 동아시아 기지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발견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둔하는 주일미군의 75%가 집중된 오키나와에 있어서는 지금, 새로운 기지건설을 둘러싼 문제가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지란 오키나와의 기노완시 시가지 중심에 자리잡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지인 미해병대 후텐마 비행장의 대체시설로서 건설되는 것으로 장소는 오키나와의 나고시 헤노코 해역입니다.

이 해역은 바다짐승 듀공이 생식하고 산호와 해조 등 생물 다양성으로 풍부하여 너무나 귀중한 바다로 오키나와 사람들의 대다수가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환경 영향 평가 또한 미비함이 지적되어 신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지난 8월 19일, 환경 영향 평가의 재절차와 손해배상을 정부에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기지건설에는 건설에 따른 모래 채취 문제 또한 지적 받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바다모래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질 정도로 방대한 1700만^m의 모래가 신 기지건설에 필요하여 자연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기지건설에 문제뿐만 아니라, 히가시촌 타카에 마을에서는 새로운 착륙대의 건설 또한 예정되어 있어 풍부한 숲과 거기에 살고 있는 동식물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군용기의 훈

련에 의한 폭음, 연습에 의한 산불과 유탄, 미 군인에 의한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여 오키나와 주민의 안심과 안전한 삶은 현재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동아시아 기지 환경문제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주둔하는 군대가 얼마나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 방지책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제안과 운동의 방향, 결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지, 군대가 필요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목표로 연대하여 노력해 갑시다.

용산기지 기름유출 사건을 통해서 본 한미당국의 문제점

이수정 (민주노동당 서울시의회 의원)

주한미군은 1945년 해방이후 60여년동안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 용산기지를 주둔시켜왔다. 용산 기지는 그동안 미군이 저지른 기름유출로 인해 기지 곳곳의 토양과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기름유출로 인한 용산기지 환경오염은 미군의 고의적인 은폐에도 불구하고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의 제보와 기지 밖으로 유출되어 확인되어왔다. 이렇게 밝혀진 기름오염사건만 해도 13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미군은 기름유출로 인한 용산기지 환경오염이 한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은 13건에 이르는 환경오염을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마음속 깊은 사과와 재발방지, 정화비용 부담이라는 상식적인 조치마저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은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당국간의 합의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미군의 오만한 태도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한국정부가 방조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용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대표적인 환경오염 사건을 짚어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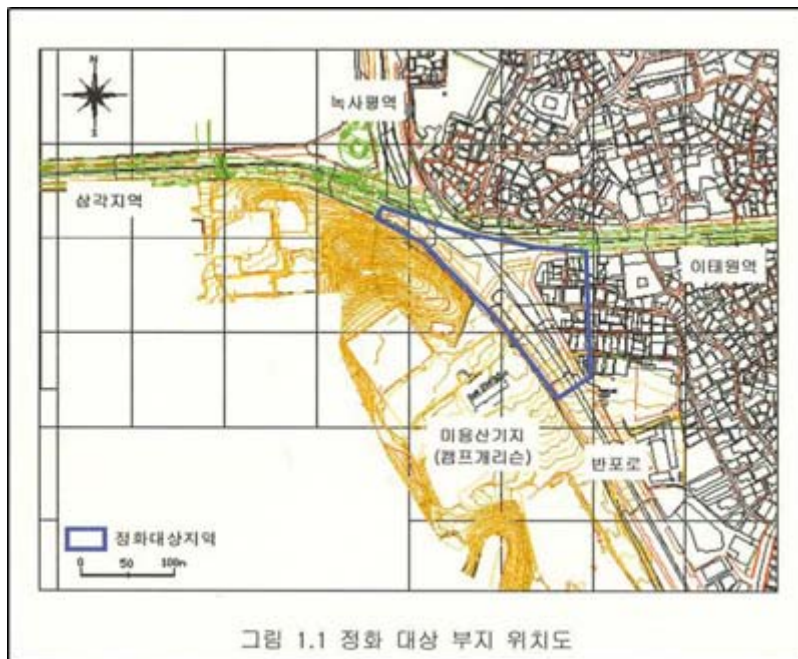
용산기지 기름유출로 인한 녹사평역 지하수오염사건

지난 2000년 7월 당시 맥팔랜드 미8군 영안실 부소장(현재 영안실 소장)이 한강에 시체 방부제인 포르말데히드를 무단방류해 서울시민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 맥팔랜드 사건은 영화 '괴물'을 통해서 잘 알려졌지만 당시 한강에 무단방류한 포르말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듯했다.

그런데 다음해인 2001년 1월 또다시 용산기지 인근에 있는 녹사평역(지하철 6호선) 터널 내에서 기름이 발견되었으니 연이은 악재에 서울시와 정부는 물론 의혹에 휩싸인 미군이 심히 당혹했을 거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언제나 한국정부와 국민 위에 군림하며

고압적이고 안하무인이었던 미군이 서둘러 서울시와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를 수용하고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맥팔랜드 사건에 대한 서울시민의 분노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미 당국간의 공동조사 끝에 2003년12월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기름오염은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 부지 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유출발생한 사건으로 결론지어졌다. 또한 기지 밖은 서울시가, 기지 내는 미군 측이 오염정화를 맡기로 하고 기지 밖 정화비용은 한미 SOFA절차(청구권 조항)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미군 측이 부담키로 합의하는데 이르렀다.



<그림-1> 기지 밖 오염지역
(서울시 07년 2월 보고서)

언제나 그랬듯 합의를 깨드리고 진실은 은폐하는 주한미군

서울시는 한미당국간 합의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 기지 밖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오염확산 방지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지하수 위에 뜬 부유기름을 제거하고 녹사평역 인근 교통안전지대에 양수탱크를 설치해 기름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제거하며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2003년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양수해 폐수 처리한 지하수는 총 750ton이며 67.45L의 부유기름을 제거해왔다. 이 작업으로 2009년까지 소요한 예산은 약 20억이고 2009년에는 1억을 배정해 오염확산 방지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널 내 기름이 발견된 지 9년, 한미당국의 합의가 있는 지 6년이 된 지금 지하수의 오염 정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지하수의 오염정도를 확인하고 부유기름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지하수관측정인 BH-34의 경우에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오염조사 결과 발암물질인 벤젠이 21.773mg/L

(정화기준치의 1451.5배)였는데 2008년 8월에는 20.940mg/L(정화기준치의 1,396배)이 검출되었다. 기름과 중금속으로 한 번 오염된 지하수의 경우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고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5년이나 걸린 정화작업을 통해 오염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표-1> 2008년 8월 오염수치 현황(서울시 자료)

구분	오염지하수 정화기준(mg/L)	최대농도(mg/L)				08년 8월 정화기준 대비
		07년 12월	08년 6월	08년 7월	08년 8월	
벤젠	0.015	6.589 (BH-7)	16.955 (BH-34)	15.445 (BH-34)	20.940 (BH-34)	1396배
톨루엔	1	8.292 (BH-34)	10.205 (BH-2)	8.520 (BH-2)	8.665 (BH-2)	8.66배
에틸벤젠	0.45	1.730 (BH-7)	1.328 (BH-7)	0.675 (BH-1)	1.266 (BH-2)	2.81배
크실렌	0.75	7.578 (BH-7)	6.198 (BH-2)	4.833 (BH-2)	6.273 (BH-2)	8.36배
TPH	1.5	50.5 (BH-6)	81.7 (BH-6)	16.5 (BH-6)	24.1 (BH-7)	16.1배

그런데 한국농촌공사가 2004년부터 매년 서울시에 제출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에서 오염 수치의 개선이 왜 어려웠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2006년 6월 보고서에는 'BH-34(지하수관측정)호공의 벤젠 농도는 지하수 오염정화 기준치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류의 대수층(지하수를 함유한 지층)내 유입시점이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미군기지 내의 추가적인 유류 누출 가능성과 여러 지점에 오염원의 잔존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기지 밖 오염 정도가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 애초 약속을 뒤엎고 용산기지 내 정화를 미군 측이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사건 진행 현황

구분	2003년12월 합의 내용	현재 진행 경과
정화주체	▶기지 안 : 미군 ▶기지 밖 : 서울시	▶기지 안 : 미군 정화 안함 ▶기지 밖 : 오염확산방지(서울시)
정화비용	▶기지 밖 정화 비용 미군 부담	▶현재까지 소요액 : 20억 이상 ▶미군 거부 → 우리 정부 부담

반면 미군은 지난 2006년 11월 기지 내부 정화는 완료되었다며 한국농촌공사 용역 보고서와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지 내 정화를 완료했다는 미군 측 주장은 거짓이라 단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군이 서울시가 요구했던 기지 안 정화관련 자료 제공과 기지 안 조사를 철저히 묵살해왔던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결국 미군이 2003년12월 한미당국의 합의 사항을 철저히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민은 물론 한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2006년 또 다시 발생한 캠프킴(Camp Kim) 기지 밖 기름오염사건

지하철 1호선 남영역 근처에는 캠프킴 기지가 있다. 용산기지의 주변부지이기도 한 캠프킴 기지 밖에서 기름유출이 확인된 것은 지난 2006년 7월이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직후 기지 밖에서 유출된 기름이 미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미군에게 기지 안 공동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미군은 2006년 8월 단 한차례 회의만을 참석한 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은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과립치한 모습도 보여줬다. 미군은 한국정부와 서울시에 알리지 않은 채 2006년 9월 기름유출이 의심되었던 기지 안 지하유류저장탱크를 청소하고 그해 12월에는 증거인멸을 위해 지하유류저장탱크를 외부로 반출해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미군이 이렇듯 신속하게 지하유류저장탱크를 제거한 것은 크게 파손되어 그동안 기름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을 없애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 8월 용산구청이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 추진하고 있는 기지 밖 오염 정밀조사 과정에서 지하수 위에 뜬 기름두께가 무려 3m10cm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건 발생 직후보다 오염 정도가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진-1. 지하수 위에 뜬 부유기름 제거 작업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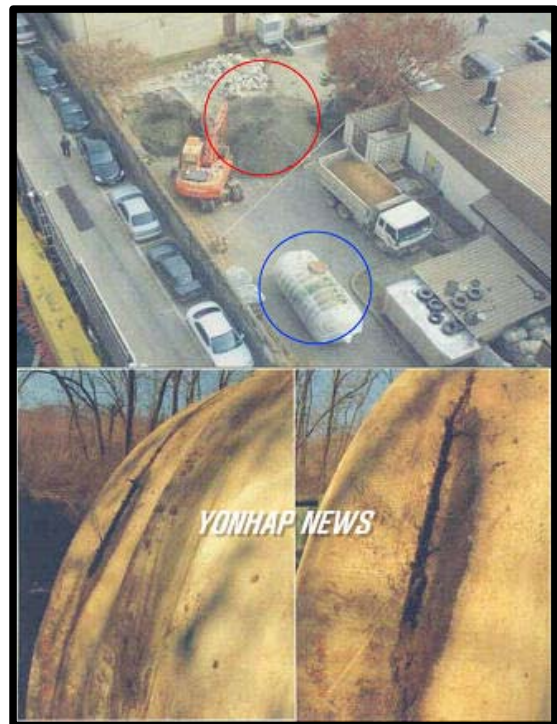


사진-2. 지하유류저장탱크 제거작업과 파손된 탱크 모습

것이다. 또한 기지 안 기름유출이 현재진행형이며 기지 밖 토양뿐 아니라 지하수까지도 오염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캠프킴 사건은 미군이 환경오염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2년이라는 시간동안 기지 안 공동조사와 오염원 제거를 거부하면서 오염이 심각해지고 확산되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3> 2008년 8월 오염수치 현황(서울시 자료)

일 시	관측정 지하수 위에 뜬 부유기름 두께 측정결과(m)							기름 수거량(L)
	MW-2	MW-6	MW-7	MW-8	MW-9	MW-10	MW-11	
계								37.285
'08. 5. 2	●(0.150)	○	○	-	-	-	-	0.200
'08. 6. 24	○	○	● (0.020)	-	○	● (0.35)	● (0.004)	0.605
'08. 7. 15	● (0.192)	○	● (0.010)	-	○	○	● (2.778)	9.470
'08. 8. 21	-	○	-	● (0.030)	● (1.460)	● (0.616)	● (3.106)	20.500
'08. 9. 19	○	○	● (0.024)	-	● (1.439)	● (0.111)	● (0.994)	6.510

※ ○불검출, ●검출, - 미측정 / '08년 6월 신규 관측정(MW-9, 10, 11) 추가설치

용산기지 환경오염 현황 폭로 및 지속적인 후속대응

한미당국은 지난 2004년 용산기지와 경기북부지역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를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 이후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2006년까지 반환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협상을 마무리한다.

본 의원은 2005년말부터 언론을 통해서 반환이 예정된 미군기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키로하는 굴욕적인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이 환경주권을 지키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다.

지난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선이후 서울시 의원이 된 본 의원은 2001년 발생한 녹사평역 지하수오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선 즈음에 발생한 캠프킴 일대 기름오염사건을 접하면서 용산기지 환경오염 현황을 분석하고 오염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방향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를 상대로 한 의회 활동, 관련 단체와의 연대, 서울시민들에게 환경오염을 알리기 위한 언론사 기고와 기지 답사 등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많은 서울시민이 녹사평역 지하수오염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 의원뿐 아니라 관련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산기지 환경오염은 개선되지 않고 계속 확산 중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 환경조항이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

게 되어있어 한국의 환경주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해도 한국정부는 물론 서울시가 미군기지 내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사평역 지하수오염사건처럼 미군이 기지 내부를 정화했다고 거짓말을 해도 이를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은 SOFA 환경조항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더욱이 SOFA 환경관련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한국정부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었으니 이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미군의 환경범죄를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한국민과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의 불평등한 SOFA 환경조항 개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으니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사건 당시 서울시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누구보다도 이 사건의 진실을 너무도 잘 아는 당사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 한복판에서 미군에 의해 연이어 저질러지는 환경오염 사건에 입을 꼭 다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그동안 단한차례도 사건 해결의 방안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미군의 환경범죄를 방지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로 인해 미군은 전국 곳곳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미군기지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정화의 모든 책임을 한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더욱이 용산기지가 2014년 반환될 예정인데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화 비용을 고스란히 한국민이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을 전면개정해서 환경주권을 지키고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가나가와현 미군기지, 현 상황과 과제

노모토 요고 (기지가 없는 가나가와를 목표로 하는 현상공투회의)

1. 가나가와의 위치관계

가나가와는 수도 도쿄의 남쪽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그 동남부는 태평양에 접해있고 도쿄 바다의 현관 입구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 제국시대에는 국내 최대의 해군기지가 가나가와의 요코스카에 배치되었다. 또한 1925년에는 육해군의 항공부대가 정비됨에 따라 도쿄 내의 군사기지가 비좁아져 가나가와의 중앙부에 새로운 군사 거점이 만들어졌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모든 시설이 미군에게 접수되었다. 그 후에 그 일부가 일본의 '자위대'와의 공동 사용기지로 되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키나와 다음으로 많은 미군기지를 가지는 것이 가나가와이다.

가나가와 내의 미군기지는 미군의 아시아 전역에의 전력투사 거점으로써 평상시 큰 역할을 계속 담당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육군의 '캠프 자마(Camp Zama)'는 '6.25 전쟁' 정전협상 후인 1954년 이래, 한반도의 'UN군'의 후방 사령부기지로써 그 역할을 해 왔다. (2007년 11월 2일, UN군 사령부는 요코타기지로 이전) 그리고 요코스카의 해군기지는 1973년 이후, 미군의 해외 유일의 항공모함 모항이며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곳에서 발진한 항공모함 전투단이 해상발사의 미사일 공격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완수했다. 지역에서의 일상적인 환경 피해의 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요코스카의 원자력 항공모함의 함재기(艦載機)를 상주시키고 있는 아츠키기지 군용기 폭음이다. 폭음피해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는 타카하시씨께서 발표해 주시겠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행하는 전투공격기의 굉음이 지역시민의 생활을 나날이 계속 위협하고 있다.

2. 2004년 이후의 동향

소위 ‘미군재편’이라는 것이 부시 정권 아래 본격화된 후 가나가와의 미군기지도 전체적으로 더욱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2005년 10월 28일(일본시간), 요코스카에 배치되어 있는 항공모함 키티호크의 후계 잠수함을 원자력 항공모함으로 하고 싶다고 미 해군이 발표하였다. 다음 날 29일에는 일본정부가 『미일동맹 :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 (이른바「미군재편의 중간보고」)』라는 합의문서에 공동 서명하였고 캠프 자마에 미 본토로부터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이전시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게다가, 이듬해 2006년 5월 「미군재편의 최종보고」에서는 캠프 자마의 관리하에 있는 「사가미 보급창고」에 미 육군의 전투지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센터가 신설된다는 계획도 공표되어 현 중앙부의 기지가 사령부 기능으로써 강화되려고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사가미하라나 요코스카 기지에 가까운 이케고 지구에서의 미군 주택 증설 계획도 기정방침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미군재편의 미일 합의문서에서는 아즈키 기지의 군용기 폭음을 경감시킨다는 명목으로 이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를 야마구치의 이와쿠니 기지로 이전시키고 대신에 이와쿠니의 자위대기를 아즈키에 옮긴다는 계획도 나와 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되지 않는 요코하마시 내의 5곳 기지용 부지는 재편계획 전체의 진행을 전제로 일본 정부에 반환될 것이라는 것, 사가미 보급창고에 대해서도 기능면이 강화되는 반면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17헥타르의 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반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의 기지부담의 경감’ 중, 주요지인 아즈키 기지에 관해서는 지역의 주민운동이 미국 본토로의 철퇴 이외의 부대이전 그 자체를 ‘피해 회피’로써 반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지역 자치체가 ‘반환 그 자체는 환영’이라는 태도를 나타낼 뿐이어서, 구체적인 반환 일정은 전혀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가나가와 내의 일 반적인 여론이 ‘지역의 기지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배경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하겠다.

3. 요코스카의 원자력 항공모함 문제

지역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2008년 9월 25일 요코스카에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배치가 강행되었다.

이 과정에서는 요코스카를 향해 미국 본토를 출항한 조지 워싱턴호가 약 2주 뒤, 태평양에서 함내 화재를 일으키는 바람에 다시 귀국하여 응급수리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요코스카 배치는 약 한 달 정도 늦어졌지만 결국은 이것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입항 후에도 조지 워싱턴을 둘러싼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요코스카에 배치할 당시, 미 해군은 원자로에 관한 수리 등의 작업에 대해서는 요코스카에서는 일체 하지 않겠다고 합의 문서로 언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9년 1월 5일에서 5월 초에 걸친 4개월동안 행해진 수리작업에서는 원자로의 1차 냉각계에 관련된 작업뿐만 아니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함체로부터 반출하는 작업까지 요코스카항 내에서 행해졌다. 일미 합의 외교문서는 조지 워싱턴호 입항 후 단 3개월 만에 없었던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일본정부가나 요코스카 시장 어느 쪽도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입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시간에 걸친 수리작업을 한 것이나 화재 후의 응급수리 그 자체가 미군 스스로의 눈으로 봐서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 원자로 부분을 포함하여 완전성에 불안의 여지가 있는 상태인 채로 요코스카에의 배치가 강행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호 배치 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그 밖에도 있다. 입항 후 겨우 3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 전략 미사일 발사용의 최대급 원자력 잠수함 오하이오가 기항하여 며칠 째 체재하고 있었다. 그 후에도 2009년까지 원자력 잠수함의 요코스카에의 기항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8월 24일 조지 워싱턴호가 먼 곳으로 항해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다른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تز가 요코스카에 기항하고 있다. 이 기항에 대해서 미 해군당국은 승무원의 휴양과 지역에서의 친선교류 등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상주함 이외의 항공모함이 일부러 기항해 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빈번히 있었던 적은 절대로 없다.

4. 가나가와 중앙지역의 육군기지 증강문제

미군재편의 최대 주요사항으로 불리는 ‘캠프 자마’에의 제1군단 사령부 이전에 관해서는, 2007년 12월 19일에 사령부의 파견 기관인 ‘제 1군단 전방사령부’가 캠프 자마 내에 발족함으로써 하나의 전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이라크 전쟁에서도 큰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중요 사령부가 미 본토로부터 일부러 이전해 온다는 사태에 대한 지역의 반발은 굉장히 컸고, 원래 ‘보수계’이며 미군과의 친선에도 적극적이었던 자마 시장이 기지와 우호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자마시 및 사가미하라시와 여러 지자체들이 합쳐서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각각 유권자 절반 및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의 서명을 모으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반발을 받아서였는지 당초 2008년 가을에 제 1군단 사령부 본체가 약 300명 체제로 이전해 오는 계획이었는데 2007년 12월 시점에서 파견기관 30명 체제만으로 발족하였다. 이후 증원은 이뤄지고 있지만 사령부 본체의 이전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조금 축소된 형태로 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육상 자위대의 대테러 작전 부대인 중앙즉응 집단사령부가 같은 캠프 자마에 이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가미 보급창고에 2008년 4월 2일부터 신설되고 있는 전투지휘 훈련센터에서도 당초부터 자위대와의 공동연습이 예정되어 있는 등, 자위대를 미군아래 보다 강하게 편입해 가는 체제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5. 지역적인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나가와에는 이상 서술한 것 외에도 이전부터 기지의 존재에 기인하는 다음과 같은 환경 피해가 있었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상시 여러 군용함선이 드나드는 요코스카 군항의 해수 및 주변 토양에 대한 중금속 등의 오염. 군사물자의 집적기지인 사가미 총합 보급창고에서 과거 PCB등 대량의 오염물질이 보관되어, 이것의 안전관리가 걱정된 문제. 또한 사가미 보급창고에서 카드뮴·도금 부품세정 배수가 부근 강에 유출, 관련 물질의 매립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등. 또한 캠프 자마에서는 기지 내

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골프장에서 주위의 주택지에 골프공이 날아들어가 그 공에 이웃 주민이 맞아 중태에 이르는 사례가 1980년대에 있었다.

최근에는 캠프 자마의 기능강화에 따라서 동 캠프 주변에서 군용 헬리콥터의 비행 소음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동 캠프의 골프공 피해에 대해서는 2008년 봄부터 골프 코스의 변경 때문인지 더 증가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1년간 주위의 주택지에서 발견되고, 카운트 되고 있는 것만으로 주택지로 날아온 공은 144개. 그 중 81개는 인접한 중학교 교내로 날아든 것으로 해당 중학교 PTA(학부모 육성회)가 기지 내 골프장의 즉각 사용중지를 요구한 것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속에서 2008년 5월에는 초등학생이 골프공에 맞아 부상당하고 2009년 4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유치원생이 눈 앞에 볼이 떨어지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미군측은 골프 코스의 일부 사용금지를 약속하면서도 몇 주만에 철회하는 등, 인근 주민의 인명 위험을 공공연하게 경시해 왔다.

6.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기 위한 운동’의 재부흥을 향하여

가나가와의 기지철거 운동은 오랜 시간의 많은 노력으로 전투 공격기의 폭음피해의 위법성 인정을 확립 판례화시키고 베트남전쟁에서는 출격하려 했던 전차부대를 시민의 데모로 48일간에 걸쳐 저지하는 등의 역사가 있다. 한 편, 그 힘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으며 동시에 그 이상의 피해가 아시아, 세계에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선후배의 노력을 이어가며 여러분들과의 협력에 의해 새로운 힘을 길러, 보다 평화로운 아시아에 공헌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 가고 싶다고 깊이 생각한다.

원주 미군기지 기름유출 대응투쟁을 통해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역할

박수영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1. 원주시민모임의 2002년 활동과 2009년 활동

1) 주요 활동 내용

○ 2002년 기름유출 관련 투쟁은 피해 지역 주민 대책위가 구성되고 시민단체들이 캠프롱 앞에서 장기간의 천막농성이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60일간의 천막농성과 더불어 원주시민 1,000여명이 참여하는 인간띠잇기대회, 매주 토요일집회와 1만인 서명운동, 원주시민캠페인, 환경부 항의방문, 용산 미8군 기지 앞 항의시위, 전화설문 등 실로 다채로운 투쟁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이에 호응하였으며, 이런 활동의 성과로 주한미군 사령관의 기름유출 시인과 사과, 보상 약속을 받아 냈다.

○ 2009년 기름유출 관련 투쟁은 2002년 보다 훨씬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지만, 단체들이 피해 주민들과 또한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적었다.

그나마 미군을 자극했던 활동은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에게 항의엽서쓰기였다. 미군과 환경부는 2002년 상황처럼 자신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두려웠고, 때문에 환경부는 원주시민모임의 활동이 보다 왕성해 지기 전에 서둘러 기름 유출 지역을 복원해 버림으로써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2) 활동 비교

2002년 투쟁과 2009년 투쟁은 모두 같은 캠프롱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이라는 사

실은 일치하지만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다.

	2002년	2009년
피해 주민 대책 위 구성	피해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도록 시민단체에서 지원하였으며,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천막농성도 주민대책위와 함께 진행. 주민피해 설명회 등과 같은 활동이 돋보인다.	지자체가 나서 피해주민의 기름유출 사건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단체도 별도의 주민대책위를 구성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주민피해 상황이 적은 원인도 있다.
일반적인 시민단체의 위상	당시 시민단체의 위상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등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촛불집회 혹은 그 이후에서 보여진 것처럼 대안제시에 피로감을 느끼고 관습적인 운동방식으로 비교적 위상이 낮게 추정된다.
원주 대책위의 활동	주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천막농성과 같은 어려운 일도 감당해내고, 매주 토요일집회를 성사한 것처럼 활동이 끈기 지 않고 헛수도 많다.	성명서, 기자회견, 기관장 면담 등의 활동이 주를 이루고 주민과 함께하는 부분이 적다. 그러나 한국,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엽서쓰기와 같은 투쟁 형식은 돋보인다.
시민대책위 내부 결합도	내부 활동력과 결합도가 높았다. 지역 내 민주화운동단체들로 구성되었으나 미군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싸움은 경험이 없어 투쟁의 승리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대표단, 실무자,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운 투쟁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결합도가 낮다. 참여 단체 수는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지만 이름만 걸고 참여하지 않은 단체가 많았으며, 시의회 등이 결합하면서 투쟁 수위, 원주시를 상대로 한 투쟁방향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
지자체와의 관계	별다른 관계를 없었다. 주로는 미군과 환경부를 대상으로 투쟁을 진행하였다. 다만, 이후에 투쟁의 성과물로 공식적이지는 않았지만 원주시 환경과 공무원들과의 결합력이 좋았다. 또한 시의회가 이후 여러 활동에 개입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시의회가 대책위 결성 당시부터 참여하였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성과가 없다. 오히려 환경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원주시는 오염지역 복원을 서두르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원주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경우 원주시와 접점을 형성하는데 있어 소극적이었다.
시민단체의 협상력	당시에는 지자체나 환경부와의 협상보다는 사실관계를 알리고 기름유출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협상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 이렇 이유로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많이 다가갈 수 있었다.	시의회가 참가하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지자체와의 협상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원주시와 협상을 시의회가 주로 맡았고, 원주시의 일방적인 복원에 시의회가 찬성입장을 보이면서 투쟁은 소강상태에 빠졌다.

2. 시민단체와 행정기관의 역할

1) 시민단체의 활동

○ 2002년도의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민에게 사실관계를 알리고 주민을 조직화하고, 주민피해 설명회, 천막농성, 토요집회와 같은 적극적인 투쟁을 선도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 2009년도의 활동은 시의회가 참가하고 지역의 진보, 보수 단체 등 40여개의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그러나 주로는 성명서, 기자회견, 면담과 언론플레이, 상충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이루고자 하였다.

물론 2009년도 활동에서 피해주민들에 대한 조직화가 부족했던 것은 우선 직접적인 피해 주민의 수가 1명으로 2002년에 비해 매우 적었고, 피해 범위가 작았던 이유가 있다.

그러나 거리로 나가 원주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적었다. 이런 활동에 대해 일정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일 정도이다.

○ 이상의 비교에서 보여 지듯이 주민들을 미군기지 기름유출 해결의 주인으로 세우고, 주민들에게 사안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이 미군과의 싸움에서 가장 유력한 문제 해결 방안임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엽서쓰기와 같은 투쟁을 미군이 가장 싫어했다는 사실을 후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군과 환경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민들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다.

○ 원주의 경우 2002년과 달리 2009년에는 진보, 보수 40여개 단체가 모이는 기업을 토했으나, 이 안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하는 기회가 적었다. 특히 참여한 단체의 경우 집회나 거리 선전전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원주시와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원주시민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져왔다.

○ 여러 단체가 각 단체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활동을 내오지 못한 집행부의 기획력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 그러나 대체로 시민단체의 가장 큰 문제는 대안 생산능력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참여 제도의 형성이나 정책과정의 민주성, 절차성 확보 등 절차적 민주주의에 많이 주목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설적인 비판능력, 대안 수립 능력, 여론 형성 능력, 지자체와의 협상력 등 내적인 정치력을 발휘하는 대목에서 원주지역 시민단체의 내적인 능력이 아쉽기만 하다.

○ 지자체와 접점을 형성하지 못함이 문제이다. 2002년 투쟁의 경우에는 미군과 환경부를 상대로 투쟁하였으므로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고 지자체를 상대로 투쟁하는 것에 대해 지자체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회피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내부적으로 이를 조정하기가 어려웠다. 지자체와의 일정한 협상력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깊은 토론이 부족했으며, 대안 제시가 마련되지 않았다.

○ 원주 미군기지의 문제가 환경오염 치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환기지의 활용 문제까지 겹쳐서 다가오는 시점에서 지자체와 어떻게 협상력을 유지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주민과 함께하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행정기관의 역할

○ 환경부, 외교부 등 중앙의 행정기관이 미군문제에 있어서 기초적인 협상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이미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런 결과로 - 불리한 협상을 한 결과로 법원에서도 인정한 협상관련 주요 문서의 정보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한미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정황상 - 북한 핵문제 등 안보에 중요한 변수 -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렇더라도 안보의 문제와 환경오염, 주민피해의 문제는 구별해서 다루어야 한다.

미군 문제 해결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크게 다른 점은 주민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주민들과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활동에는 초보적인 모습이다. 보다 세련되고 능숙한 주민행정이 아쉽다.

○ 지자체의 경우 종전에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군기지가 반환되고 기지 개발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있어서 지자체가 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면

- 반환 공여지 활용에 있어서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민과 관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에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 개발 계획 전 후 공청회, 개발 계획 발표회,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지 보상 안내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 반환공여지 환경오염 문제를 원칙적이고 신중하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반환기지 개발에 눈이 멀어 환경오염과 각종 위험물 제거를 대충 처리한다면 개발된 땅을 다시 폐쇄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반환공여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서는 실천 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고 홍보를 통한 자율적인 주민감시제 등을 검토해 보자.

-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의 토지 수용 시 해당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 반환기지를 특화된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미군기지의 반환은 ‘평화’와 ‘생태’의 개념이 상징적으로 녹아있다. 주변 도시 계획과 잘 어울리는 선에서 평화와 생태의 의미가 피어나도록 개발해야 한다.

○ 원주와 같이 아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는 반환을 준비하는 활동들을 진행해야 한다. 그 활동으로는

- 기지 밖 환경오염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기지 내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기준을 미군, 환경부, 국방부 등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합리적인 치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시민공원을 만들기로 예정되어 있는 곳은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 알맞게 평화와 생태의 의미가 담겨있는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 종합계획에는 기존 시설물(막사, 운동장, 도로, 조림, 공원 등)의 재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검토해야 한다.
-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공청회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숙원사업 등이 배려되어야 한다.
- 이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현재 환경, 건설, 도시개발, 도시디자인, 기획예산 등 부처별 협조가 잘 진행되도록 유관 부서 협조체제를 잘 갖추거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반면 시의회의 경우 ‘00시 미군기지 반환 및 시설 이전에 따른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통계조사 및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조사, 개발 계획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지자체가 미군기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종전처럼 중앙부처의 눈치만 보며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해서는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 주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기초하여 원칙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기지 반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주인공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3. 원주시민모임 이후 활동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원칙

1) 주민을 중심으로 사고하자.

환경오염에 대한 치유, 피해 보상 등의 문제나 반환기지에 대한 개발 문제 등 미군 과련 모든 문제의 중심은 주민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투쟁하였느냐가 활동의 관건이다. 시민단체의 생활력도 사실 이 안에 있다. 주민을 중심으로 투쟁 판을 새로

짜야 한다.

2) 환경정화와 반환기지 활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반환기지 활용에 눈이 멀어 환경오염 치유의 원칙과 각종 위험물 제거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자. 특히 기지 폐쇄 이후 국방부 등과 타협하는 일이 발행할 수도 있다. 환경 오염 치유 기준을 바르게 세우고 상식에 맞게 오염 문제를 해결할 후 개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시민단체의 내적 능력이 중요하다.

우선 대안생산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기지 개발로 넘어가는 단계에 들어서면 매우 복잡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다. 미리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두고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지자체에 대해 먼저 제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지자체와 협상력이 요구된다. 지자체와 이해가 깊은 단체는 조정을 통해 다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협상단위는 별도로 구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4) 민관 협치(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자.

미군기지 문제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매우 좋은 모양을 가질 수 있다.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로컬 거버넌스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민단체의 내적능력(대안 생산 능력과 상황에 따른 분석 능력)이다. 동시에 내용의 중심을 언제나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나오며

2002년 투쟁을 기억하자. 미군기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누구나 말만했을 때 기어이 투쟁을 성사시키고 마침내 미군을 굴복시켰던 활동가들의 신념 넘치던 노력과 용기를 잊지 말자. 대중을 믿을 때, 대중과 함께할 때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한국-일본-오키나와 미군기지 환경문제 대응에 관한 연대의 의미와 전망

서재철 (녹색연합)

1. 동북아 비극이 불러온 미군

동북아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은 전쟁이란 비극적 역사가 계기였다. 일본군국주의가 동아시아를 피로 물들이는 15년 전쟁을 시작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다. 오키나와가 초토화된 것을 비롯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었고, 도쿄를 비롯하여 일본 본토의 많은 도시도 공습의 참화를 겪었다. 이런 고통의 종결과정에서 오키나와 전역이 미군기지로 변하였고, 일본 본토에도 도쿄와 가나가와를 중심으로 미군기지가 대규모 주둔했다.

일본에서 비극의 역사가 낳은 미군의 주둔은 오키나와와 관동(칸토)에서 끝나지 않고, 한반도의 남쪽까지 이어졌다. 더욱이 15년 전쟁을 종결 과정에서 다시 되살아난 대결의 뿌리는 한반도 전역을 피로 물들인 한국전쟁으로 되살아났다. 이 전쟁으로 300만에 달하는 남과 북의 민중들이 죽어갔다. 아울러 한국전쟁의 종결은 평화의 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닌 정전(휴전)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한국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미군의 주둔이 고착화되었다. 이처럼 동북아 미군의 주둔은 출발이 일본군국주의가 뿌리 전쟁의 씨앗이었으나, 이후에는 또 다른 전쟁과 대결의 당사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일본-오키나와에 대규모 미군의 주둔으로 이어졌다. 전쟁이 전쟁을 낳고, 대결이 대결을 낳았으며, 군대가 군대를 부른 것이다.

2. 미군 주둔과 환경문제

한국-일본-오키나와 등에 미군이 주둔을 시작한 초기에는 법과 상식이 통하지 않은 점령군으로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도 했다. 냉전이 격화되었던 70년대말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상황은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일본-오키나와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주둔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구조화되어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 바로 환경문제다.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전투기와 헬기의 비행과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비롯하여 각종 유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 온갖 포탄과 미사일, 실탄으로 인한 중금속 및 화약류 오염 등이 나타나고 있다.

무릇 군대란 대규모의 에너지 소비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오염물질을 양산시킨다. 엄격한 환경관리를 하지 않으면 환경문제의 백화점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일본-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는 미국 본토와는 다른 기준으로 기지를 사용하고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피해가 간단치 않으며 방치할 경우 수십년 수백년 오염이 확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아울러 미군의 외면과 당사국인 한국-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여전히 해결은 먼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지자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개별적 현실을 뛰어넘어 연대를 모색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3. 한국-일본-오키나와 연대하며 달려온 길

1990년대 중반 한국과 오키나와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토론회와 연대활동이 조직되었다.

미군의 오키나와 점령 후 진행된 강제 토지점수에 저항해온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이 1990년대에 들어 토지임대기간 갱신 거부, 반전 지주회와 한평반전지주회의 활동이 한국에 알려지고 1995년 미해병대원들의 소녀폭행사건에 대한 오키나와의 대중 투쟁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매향리 사격장 문제는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일본 도쿄, 카나가와 등 여러 지역의 연대로 이어졌다. 매향리와 비슷한 처지인 홋카이도 야우슈베츠 훈련장, 규슈 오이타의 히쥬다이 훈련장 등 지역의 주민들과 교류방문이 이어졌다.

또한 2002년 비극적인 두 여중생의 장갑차 압사사건으로 시작된 한국의 미군에 대한 규탄운동에 대해 일본과 오키나와 단체와 활동가들로부터 다양한 지지와 지원이 이어졌다.

이런 흐름은 주한미군 재편과 주일미군 재편에 따른 기지 이전과 확장 문제로 이어져갔다. 헤노코 해상기지 건설 저지 농성 투쟁과 해상시위는 한국의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대투쟁과 같은 맥락으로 연대활동과 상호 지지방문 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헤노코, 이와쿠니 등 기지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사례는 한국 단체들과 언론의 폭넓은 관심과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

이처럼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미군기지 문제 현장과 사건에 대해서 일본과 오키나와의 평화 운동가들과 지역 주민들의 교류와 방문이 이어졌다.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 운동의 역사가 깊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활동이 활발한 일본과 오키나와를 방문하고 교류하는 한국의 시민단체들도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 전후까지는 일본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현장을 방문하는

주체들이 주로 한국에서 미군기지 활동을 하는 단체와 운동가들이었으나, 2002년 이후부터는 평화에 관심이 있거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단체들의 방문도 이어졌고, 한국 언론의 관심도 커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2007년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일본-오키나와가 함께하는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한 실천으로 나온 것이 교류와 교환조사 방문 그리고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출발된 것이 2008년 4월에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제1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다. 이를 위해 2007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한국의 활동가들은 일본과 오키나와의 기지 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방문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의 활동가들도 한국에 조사 성격의 교류방문을 시작했다.

무릇 세상사가 그렇듯이 관계라는 것은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 이웃 간의 관계에도 그렇지만 민간끼리의 연대 특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집단 간의 연대에서도 서로 같음이 무엇인가를 살려가고 다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고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는 국제적인 성격의 군대이며 활동범위도 세계적이다. 한국-오키나와-일본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는 각국의 입장에 갇혀서 바라보고 인식하는 틀로는 그 실체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4. 우리의 과제

그래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오키나와 미군의 틀을 넘어 국제적인 성격의 미군에 대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각자의 지역에 갇혀서 미군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공통의 피해와 문제가 있는 지역과 나라들이 모여서 국제적인 연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1) 워싱턴을 향한 활동

이런 관점에서 제기되는 과제가 바로 워싱턴을 향한 직접 활동이다. 지금까지 한국,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문제가 생기면 현지의 미군부대나 자국 정부를 상대로 항의하여 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주한미군도 주일미군도 주둔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결정과 방침은 하와이를 넘어 워싱턴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서 놓칠 수 없는 집중점이 바로 워싱턴에 있는 미국 정부와 미국 의회이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과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부터 해외주둔군에 대한 정책과 방침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회도 중요하다. 미국은 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나라다. 여기에는 군대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해외주둔군과 관련된 문제 특히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해결에 의회를 활용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한 활동이지만 어려움도 있다. 우선 영어라는 언어의 문제도 있고, 현지에서 우리를 지원할 단체와 조직도 쉽지 않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와 안목도 중요하다.

특히 한국-일본-오키나와 모두 절실한 것이 미군이라는 군대와 군사 활동에 관한 정보와 동향이다. 이를 위해서 시급하게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 정보공개청구에 관련된 절차와 방법이다. 단기적으로 워싱턴을 전망하며 연대활동에서 힘을 기울여할 분야다.

아울러 워싱턴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언론에 대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다. 이런 활동들은 초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들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면 문은 열릴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국과 일본과 오키나와를 오고가는 활동을 넘어서 워싱턴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연대에서 놓칠 수 없는 과제다.

2) 소통의 강화

인터넷을 비롯한 미디어의 발달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있다. 미군 기지운동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혹은 외신 기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좀더 폭넓고 일상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블로그나 카페 등의 공유마당을 뛰어넘는 방식이 절실하다. 사례로 립피즈 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서 각자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대응 활동을 일상적으로 나누고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을 절실하다.

3) 교육의 강화

소통과 함께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한국-일본-오키나와는 공통점과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를 서로 정확히 인식하고 각자의 장점들을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 어쩌면 연대란 것이 이슈와 의제에 대해서 함께 공동 행동하는 것이 일차적일지라도, 일상적으로는 경험과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의 활동력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환방문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며 심포지움처럼 정기적인 토론과 인식의 장은 계속 확대 발전되어야 한다.

아직 심포지움은 당초의 기대에 비해 미약한 부분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활동경험과 성과를 나누는 것은 평가나 비교검토의 의미가 있으며 깊이 있는 연구와 성찰의 의미도 있다.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피해 대응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이 당장 큰 이슈가 되지 않더라도 지속해 나가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

4) 미래세대의 참여

이런 흐름과 함께 미래에 모두가 투자해야 할 분야가 있다. 바로 다음세대 즉 미래세대를 키우고

이들이 운동의 주역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미군기지는 역사의 결과이고 역사적 과정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동북아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자신의 지역과 나라에 기반하여 동북아의 미래까지 바라보는 활동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찾아보아야겠지만 우리의 활동에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기 위한 실천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가능하면 2010년부터는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한국의 속담에 ‘첫 손가락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그것이 가야할 길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꾸준히 가야한다. 한국과 일본과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에 대한 대응도 이제는 각자의 지역을 뛰어넘어 하와이를 넘어 워싱턴을 향해야 할 것이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그 끝은 창대할 것이다. 바로 동북아에서 군사강국의 대결이 없고 군축과 평화가 외교의 기본이 되는 공존의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거기로 나아갈 것이다.

제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즈음하여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우리는 60년이 넘도록 한국, 오키나와,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때문에 환경오염과 소음 피해, 생존권 침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주둔 미군은 위협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전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군용기의 비행 소음, 사격 소음, 저공비행으로 우리들의 생활은 파괴되고 정신적, 신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폭격 훈련으로 버려진 불발탄이나 화학 물질,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농지와 하천, 바다가 오염되지만 미군은 복원하지 않습니다.

미군은 기지 바깥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미군은 이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주둔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해 큰 환경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이 말하는 안보와 평화는 무엇입니까?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농지와 하천이 오염되었지만 기지 내부의 문제만 처리한 후 기지 바깥 주민들의 생활 지역은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기지 바깥의 주민들은 오염된 땅에서 자란 농작물을 먹거나 오염된 물을 이용하게 되는 데, 오염을 유발시킨 미군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미국이 말하는 안보와 평화입니까?

2004년 오키나와 해병대 헬기가 대학 구내로 추락한 사고도 있었고 2009년 한국 평택에서는 민가 위를 헬기가 저공비행하여 집 지붕들이 부서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지에서 전투기 비행을 하면 많은 피해가 발생하니 비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주민들 머리위로 위험한 전투기와 수송기, 헬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군 전투기, 수송기, 헬기의 비행 훈련으로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이 한국, 오키나와, 일본 모두 수백만의 가구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신불안, 학습장애, 수면장애, 난청 등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둔 미군 정책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의 훈련은 보장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안전은 외면하는 것이 미국이 말하는 안보와 평화입니까?

최근 미국은 '재편'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기지는 폐쇄하면서 첨단 시설을 갖춘 새로운 기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헤노코에서 다카에에서 이와쿠니에서 미국이 만드는 새로운 기지들은 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어민들의 어항을 빼앗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만드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새로운 미군기지 건설계획으로 땅과 바다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심지어 ‘미국’의 ‘군대’라는 것을 내세워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정책과 경제적 이해 때문에 이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군대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하지만 주둔국인 한국과 일본 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군대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미군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미국의 군대가 이곳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지 직접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미 국방부 지침 4715.5 (Management of Environmental Compliance at Overseas Installations), 해외환경규정집 OEBGD(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 EGS(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최종적용기준 FGS(Final Governing Standards)와 같은 미국 국방부의 해외 주둔 미군기지과 시설에 대한 규정,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해외 주둔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군사적 목적으로 해외에 배치하고 있는 미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해외를 순방하면서 그 지역의 미군 기지를 방문하여 미군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기지 군인들뿐만 아니라 해외 미군들 때문에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2009년 9월 10일

제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한국-오키나와-일본
실행위원회

제2회 동아시아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즈음하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The Honorable Barak H. Obam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1600 Pennsylvania Avenue
Washington, D.C. 20500

September 10, 2009

We represent a group of citizens in Japan, particularly in Okinawa, and South Korea. It is a great pleasure for us to write a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you shoulder great responsibility as the leader. Although reading this letter is not likely to alleviate your heavy responsibility, we have faith that you will take this matter seriously because it is about people who are marginalized and mistreated by US Forces in Korea and Japan.

US troops stationed near our dwellings are operating combat training in the name of the security of the Pacific Asia region. Due to aircraft noise from gun-firing and low-altitude flight drills, our lives are devastated with a tremendous loss of personal assets, which has brought us great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Moreover, many blind shells abandoned on site, toxic substances and petroleum discharged from US bases are polluting "our" farmlands, "our" rivers, and "our" seas.

The US Forces neither take any proper measures to make amends, nor admit their mistakes. The US Forces say they hold the responsibility of securing peace in the region, but we are losing our lives because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the US Forces.

We would like to ask a question.

What do "security and peace" mean to the US government?

Do they mean destroying people's lives and polluting the local environment by spilling

toxic materials? While the US Forces dispose of toxic petroleum carelessly, we have no choice but to use contaminated water and eat polluted crops. We would like you to ask yourself a question: Isn't "security and peace" a term premised upon responsibility?

This matter is not only about pollution. There have been aircraft accidents in a university in Okinawa and also at a civilian residential site in PyeongTaek, Korea. We have been asking US troops to stop low-altitude flight operations in residential areas, but US helicopters, jet fighters, and cargo planes are flying over our neighborhoods, causing damage to our health, property, and children.

This is not about a few angry families in Korea and Japan. We are talking about millions of people suffering from excessive aircraft noise: people who are going through anxiety neurosis, learning disabilities, sleep disorders, and hearing difficulties. As we have never heard about US compensation for our losses, we would like you to think about this for a moment. Is this truly the "security and peace" that the US pursues? Ignoring local citizens' safety and their human rights?

Recently US troops are expanding their bases and building new facilities under the cloak of "relocation." If the new base constructions in PyeongTaek, Henoko, Takae, and Iwakuni are completed, they will again take away our land, which provides our livelihood, and destroy our environment. As overseas US military bases are promoting new construction projects, we are about to lose our dwellings and even our seas.

The biggest reason why US Forces in Korea and Japan are not welcome lies in the fact that US troops take improper measures against local civilians. Although military operations pose a great threat to the everyday security of local people, US troops continue to stay for their own militaristic and economic interests. Who should we hold responsible for our years of loss, pain, and damage? What about our children? Are their lives going to be jeopardized under the US slogan "security and peace", just as ours have been?

President Obama, we would like you to think about this problem with us. You must check what US Forces are doing in Korea and Japan and see what is happening to us and to our environment because of US military operations. You must know whether the US Armed Forces under your command are protecting the peaceful condition of the region and

securing local people's safety, or destroying the environment and bringing grave concerns to local communities.

We require that proper policies and measures be set in place to solve the above problems, which the US Forces in Korea and Japan have inflicted on us. The US government needs to review and correct laws and regulations such as DoD Instruction 4715.5 (Management of Environmental Compliance at Overseas Installations), OEBCD (Overseas Environmental Baseline Guidance Document), and FGS (Final Governing Standards), 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local people near US military bases in Korea and Japan.

The US administration must acknowledge the suffering of the people in Korea and Japan, and make proper amends to Korean and Japanese citizens who have been mistreated by the USFK and USFJ.

We know that US presidents visit overseas US military bases and pay attention to American soldiers' concerns. For the sake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we hope that you, President Obama, will lend an ear to the distressed citizens of the Korea and Japan.

Sincerely yours,

The names of organizations

한국 실행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http://cafe.daum.net/retake>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http://minbyun.org/>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오염된 미군기지를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원주시민모임

<http://cafe.daum.net/wjretake>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http://antiusbases.tistory.com/>

평택평화센터 <http://peacept.org/>

평화바람(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http://peacenomad.net/>

발표문을 번역해주신 미야우치 아키오님, 양노자님, 정미향님, 박진환님, 김복희님, 김마리아님
과 영상 자막을 번역해주신 정영신님, 심포지엄 통역을 해주신 강혜정님, 정미향님에게 감사드립니다.